

작년 한해 건설 하도급 거래관행 공정해졌다

기사입력 2013-03-14 06:00:20 |

폰트    

정책연, 조사 이래 공정성 종합점수 74.4로 최대

작년 한해 건설 하도급 거래관행 공정해졌다

정책연, 조사 이래 공정성 종합점수 74.4로 최대

/수주부진·자금부족 따른 업계 경영애로는 여전

작년 한해 전문건설업계가 현장에서 느낀 건설 하도급 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몰아친 경제민주화 바람과 국토해양부가 작년 한해 운용한 민관합동 공생발전위원회 주도의 제도개선 성과에 더해 원도급건설사들의 동반성장 노력이 복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2년도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 종합점수는 전년 말(65.3점)보다 9.1점이나 오른 74.4점으로 집계됐다.

전문건설업체 1670개사(응답 232곳)의 대표자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의 계약체결, 대금결정, 대금지급, 공사수행 및 사후처리, 상생협력 등 5개 분야(각 20점)에 걸친 공정성 점수를 1년에 1번씩 산정한 이번 평가는 2009년(2009년은 2번 조사)부터 시작됐다.

작년 종합점수는 2009년 평가가 시작된 후 최고치(2009년 1분기 63.1점, 2009년말 67.1점, 2010년 61.2점, 2011년 65.3점)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사 77.4점, 중형사 74.2점, 소형사 73.2점으로 전년(규모별 63.6점, 68.8점, 64.7점)보다 전반적으로 호전된 가운데 대형 전문건설업체일수록 원도급사와의 거래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후했다. 지방권(75.1점)의 하도급 거래관행이 수도권(73.1점)보다 양호하고 전년 대비 개선폭(지방권 9.7점 상승, 수도권 8.1점 상승)이 두드러진 점도 눈에 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계약 관련 공정성 점수(20점 만점)가 15.5점으로 가장 높고 공사수행 및 사후처리(15.3점), 하도급대금 지급(15.0점), 상생협력(14.5점) 점수도 전년 말보다 2점 내외씩 올랐다.

20개 세부 평가항목(5점 만점)별로 보면 하도급계약서 교부,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자 공사수행 간섭 여부 등의 공정성이 각 4점으로 호평을 받았고 하도급 기재사항 및 부대·특약조건, 하도급 대금 현금수령, 불공정거래 신고 등 보복조치 분야의 공정성 수준도 각 3.9점으로 우수했다.

반면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금액 적정성(3.3점), 공사비 조정사유 발생 때 하도급대금 조정 적정성(3.4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적정성(3.4점), 협력사에 대한 지원 여부 적정성(3.5점) 분야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도급 거래 공정성은 호전됐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물량 감소 등의 요인 아래 전문건설업체의 전반적 경영사정은 더욱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와 병행한 올해 1분기와 작년 4분기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각각 35.8로 2011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의 1분기 체감지수가 25.3으로 2011년 1분기(22.2)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토목 주력 전문건설사의 체감경기(1분기 30.8) 악화세가 두드러졌다.

가장 큰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수주부진이란 응답이 30.0%로 가장 많고 자금부족(15.0%), 불확실한 경제상황(14.1%), 인력난·인건비 상승(13.9%), 자재가 상승(11.6%), 경쟁심화(9.9%), 종합건설사 부도(4.0%), 불공정거래(1.5%) 순으로 응답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 부동산시장 침체, 업계 내 빈익빈부익부 현상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며 “올해 역시 저조한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기댈 만한 확실한 경기부양책 등이 뚜렷하지 않은 탓에 업계체감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